

 <a href="https://www.4th-ir.go.kr">https://www.4th-ir.go.kr</a>	<b>보 도 자 료</b>	
<b>보도일시</b>	<b>2018년 2월 6일(화) 10:3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</b>	
<b>배포일시</b>	2018년 2월 5일(월) 20:00	
<b>담당부서</b>	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총괄기획팀 우영규 팀 장(02-750-4720) 좌미애 서기관(02-750-4722), 김단호 사무관(02-750-4745)	

**“개인정보 관련 법적 개념 체계 정비 합의,  
 전자서명법 개정을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 활성화 방안 논의”**  
**- 4차산업혁명위, 제2차 규제·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-**

### 해커톤 개최 결과

-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(위원장 장병규, 이하 ‘4차위’)는 ‘18. 2.1~2.2일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「제2차 규제·제도혁신 해커톤」을 개최하였다.
- (2.1일 오전, 환영사 및 기자회견)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경직된 규제로 인해 새로운 시장 및 산업창출에 애로가 있다고 강조하면서, 해커톤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마음껏 토론함으로써 상호간에 이해와 신뢰를 토대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.
- 이를 위해, 당초 반기에 한번 개최하기로 했던 규제혁신 해커톤을 격월로 진행하기로 하는 등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 더 자주 토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.

- (2.1일~2.2일, 본 토론)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방안 마련, 공인인증서(전자서명법 개정)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하여, 1박2일 12시간 동안 끝장토론이 진행되었다.

### 의제별 토론 경과

#### □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방안 마련

- (의제 선정 사유)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.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다.
-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데이터 경제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.
- (참석자) 의제리더는 이상용(4차위 사회제도혁신위원,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위원이 담당하였으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행정안전부, 방송통신위원회,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·공공기관과 법조계, 시민단체, 산업계 등 다양한 단체\*에서 참여하였다.

\* (산업계) 파수닷컴, SKT, 코리아크레딧뷰로, 다음소프트  
 (시민단체)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, 진보네트워크, 정보인권연구소, 참여연대  
 (법조계) 법무법인 광장, 법무법인 율촌,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

- (토론 경과)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필요성은 대체적으로 공감 하였으나,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.

- 관련한 기존의 많은 논의과정이 진행되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과 제도의 불명확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,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기본적 개념 체계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논의하였다.

그 밖의 주요 이슈들에 관하여는 추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.

합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

### ① 개인정보 관련 법적 개념체계 정비

-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 개념체계는 개인정보, 가명정보, 익명정보로 구분하여 정비하기로 하였다. 그리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의하여 개인정보와 구분하였다.

### ② 익명정보 개념은 법에 명시하지 않음

- ‘익명정보’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‘익명정보’ 정의를 법에 명시하는 대신 EU GDPR 전문(26)을 참조하여 ‘개인정보’의 개념을 보완하기로 논의하였다.

### ③ ‘가명정보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

- ‘가명정보’의 정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.

### ④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지속적 논의 진행

-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.

## □ 공인인증서(전자서명법 개정)

- (의제 선정 사유) 정부가 공인인증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실제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, 구체적인 국민 체감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해커톤 의제로 선정하였다.
- (참석자) 의제리더는 이희조(4차위 민간위원,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) 위원이 담당하였으며, 전자서명법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를 비롯하여 각 계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.

\* (산업계) 금융결제원, 삼정회계법인, 원스, 카카오페이,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
(시민단체) 금융소비자연맹, 오픈넷  
(학계) 가천대학교, 고려대학교, 상명대학교, 한남대학교  
(정부 및 공공기관)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한국인터넷진흥원, 한국전자통신연구원

- (토론 경과) 토론자들은 5개의 논의 주제를 도출하였으며, 각 주제에 대해 정책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.

논의주제 및 합의사항은 아래와 같다.

### ① 전자서명의 정의와 법적 효력

- 현행 “전자서명” 정의\*에서 “서명자를 확인하고” 부분이 서명과 당사자 확인의 구분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. 정부는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.

\* 전자서명 :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(전자서명법 제2조2호)

-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.

### ② 안전성 평가제도

-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다양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는데 소비자가 안전성 수준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원 동의했다.

### ③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 문제

-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.

#### ④ 다른 법률과의 관계

- 국민들의 전자서명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자서명 수단의 선택을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 또는 시행령에 두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.

#### ⑤ 신뢰서비스(Certification) 제도 개선에 따른 국민체감 제고 방안

-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해야 하며,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였다.
- 국민들의 편의성 증대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간 상호연동 등 다양한 방안을 추가 검토하고, 공공 서비스부터 시범 사업을 구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.

### 향후 계획

- ☐ 2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'규제혁신 합의안'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4차위에서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.
- ☐ 아울러 향후 해커톤은 정례화(격월)하여 진행할 예정이며, 차기 해커톤은 3월 중순(3.15~16, 잠정)에 개최할 예정이다.
- 차기 해커톤에서는 택시업계와 논의한대로 '4차 산업혁명과 택시 산업 발전 방안'으로 주제를 변경하여 기술·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반적인 교통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.
- \* 참석: 시민단체, 택시업계, ICT·인터넷업계, 연구계, 관계부처 등

- 또한,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'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조화'와 관련된 의제도 다룰 예정이다. 그밖에도 업계·전문가 등 현장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의제로 추가할 예정이다.

< 부 록 > 의제별 관계부처 연락처

붙임

의제별 관계부처 연락처

의 제	부 처	담당자	연락처
개인정보보호 (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)	4차산업혁명위원회 총괄기획팀	우영규 팀 장 좌미애 서기관	02)750-4720 02)750-4722
	행정안전부 개인정보안전과	김상광 과 장 정영수 사무관	02)2100-3480 02)2100-4106
	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	배일권 과 장 박종훈 사무관	02)2100-3450 02)2100-4078
	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	최윤정 과 장 이수경 서기관	02)2110-1520 02)2110-1529
	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	배상호 과 장	02)2100-2405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	이재형 과 장	02)2110-2840
공인인증서 (공인인증제도의 폐지)	4차산업혁명위원회 총괄기획팀	우영규 팀 장 김단호 사무관	02)750-4720 02)750-4745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	박준국 과 장 김남승 사무관	02)2110-2920 02)2110-2921